



IFS 국가 정책 제언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외교·안보 정책

서울대 행정대학원 구민교 교수
한국군사문제연구원 윤석준 박사



9 773058 556003
ISSN 3058-5562

1

트럼프 외교·안보 정책 시즌 2

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외교·안보 정책

-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적이고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접근을 통해 미국이 부담하는 외교·안보 비용을 줄이는 데 심혈을 기울임
- 북대서양조약기구(NATO)와 한국 등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음
- 일견 동맹 해체 수준의 압박으로 비추어지는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동맹국 입장을 난처하게 함

대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반중 인사 발탁

- 하지만 1기에 이어 2기 트럼프의 외교·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대중국 견제이며, 백악관·국방부·국무부 등 주요 직책에 반중 인사를 발탁함
-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“중국 공산당은 미국이 맞서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, 거의 대등한 적”으로 규정함
-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근 벨기에에서 열린 NATO 국방장관 회의에서 “미국 혼자서는 중국을 억제할 수 없으며,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국 등 역내 동맹국과의 협력이 중요함”을 재확인함
- 군사안보 전략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중국 견제 및 압박 전략이 공표되지는 않았지만,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반응을 보아 가며 그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임



▶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
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
(2025.2.3.)

출처: <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11447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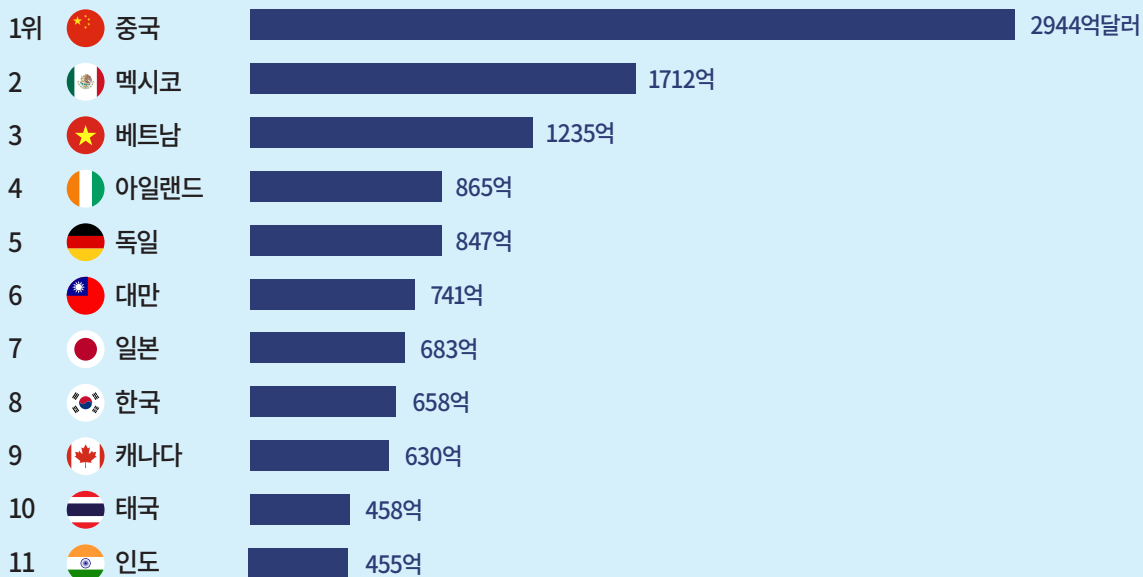
2 대중국 관세 압박



관세맨(Tariff Man)을 자처한 트럼프 대통령

-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9,1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,335억 달러(17%) 증가했으며, 이는 역대 사상 최대 적자 규모임
- 그중에서 중국과의 무역 역조(2,944억 달러)가 가장 심각해, 이를 해소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정책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

<2024년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 국가>



출처: <https://m.news.nate.com/view/20250214n00484>

중국의 대응

-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%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, 세계무역기구(WTO) 제소와 보복 관세 등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공언함
- 특히 미국이 중국에 50%가량 의존하는,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조만간 취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
- 중국은 10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세계 일류를 목표로 2015년부터 야심 차게 추진해 온 '중국제조 2025(Made in China 2025)'의 결실을 거두고 있음
- 인공지능(AI), 전기차, 배터리 등 분야에서의 눈부신 기술 약진을 바탕으로 미국의 제재로 인해 취약해진 반도체 제조업 부문에서의 기술 자립을 도모함
- 미중 간 강대강 무역 분쟁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작지만, 상당 기간 긴장 관계가 지속할 가능성이 큼

3 하이브리드 전략의 경합

중국 견제를 위한 외국 테러 조직(FTO)의 지정

- 군사적·경제적 대립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술에 대응하는 다양한 압박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시사함
- 인신매매와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(FTO)으로 지정하는 조치는 단순한 범죄 단속을 넘어 중국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
- 미국은 이미 중국이 펜타닐 전구물질의 최대 공급처라며 비판해 왔고, FTO 지정이 이루어지면 중국 내 화학 제조업체들도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함

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이슈

-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인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, 이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함
- 파나마 정부는 중국과의 일대일로 협정을 조기 종료하고, 중국 국영 기업의 항만 운영권 연장도 재검토하는 등 미국의 압박에 따라 입장을 선화하고 있음
- 트럼프 행정부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중국의 중남미 지역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 함
- 동시에, 당선인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사들여 미군을 주둔시키고, 러시아의 대서양 진출을 차단하며, 동시에 희토류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힘
- 최근 국무장관 루비오는 덴마크 정부와 그린란드에 미군 기지 확장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, 이는 대서양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



4 인도-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의 경합

인도-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공조 강화

- 2기 트럼프 행정부의 '자유롭고 열린 인도-태평양(FOIP)' 전략은 1기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구축된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맹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함
-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되었듯이,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역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함
-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동맹국들에 더 많은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커, 이에 따른 마찰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
-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동맹을 자산이 아닌 부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, 2기에도 이러한 시각은 변하지 않을 것임

중국의 일대일로 전략

- 중국은 현재 150여 개 국가와 30여 개 국제기구와 200건 이상의 협력 협정을 체결함
- 미국의 인·태 전략에 맞서 인도양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일부 참여국의 경우 항만의 군사기지화가 전개되고 있음: 캄보디아 레암항, 지부티 지부티항, 파키스탄 과다르항, 미얀마 차육퓨항, 스리랑카 함반다토항 등
- 최근 중국은 영유권 강화 포석 남중국해 해저 2,000m에 '심해 정거장' 건설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는바, 표면적 목적은 심해 광물을 연구이지만 해저 도·감청 등 첩보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큼

▶
2월 7일 백악관에서 열린 이시바
시게루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
간 정상회담

출처: <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5020809241070612>



5 한반도에 대한 파급효과와 정책 시사점



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강화의 퍼즐

-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·안보 정책은 1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유지하지만,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
- 과거보다 정책 혼선을 줄이고 전략적 명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며, 동맹국의 '고통 분담'을 더욱 강조할 것임
- 트럼프는 동맹국의 무임승차(free-riding)나 거저먹기(free-loading)를 용납하지 않을 것을 누차 강조함
- 다만 불필요한 전쟁 개입을 피하는 것이 그의 기본 원칙이며, 충격과 공포(shock and awe) 전략에 따라 상대에 대한 미국의 강한 억제력을 과시함으로써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전략을 취할 것을 천명함
-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와 정책 담당 차관 엘브리지 콜비는 모두 대중국 강경론자로, 특히 콜비는 중국의 대만 군사 위협을 단념시키기 위해 전략적 명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함

-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력 증강에 큰 관심을 보여왔으며, 미 해군 함정의 유지·보수·정비(MRO) 분야에서 한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함
- 아울러 중국 조선소에 대한 부품공급 차단 등을 유도하여 중국이 추진하는 해양강국 건설 노력을 억제할 것을 시사함

중국의 와해 전술에 대한 대응

- 중국은 이에 맞서 일대일로 전략을 지속해서 추진하며, 미국의 동맹 관계를 약화하려는 시도를 강화할 것임
-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미일 3국 공조를 약화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
- 특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도 추가 관세부과와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가하는 것을 호기로 판단할 것임
- 한국은 이에 맞서 단호한 대응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함